

현안과 과제

■ 한국경제, 일본 닮고 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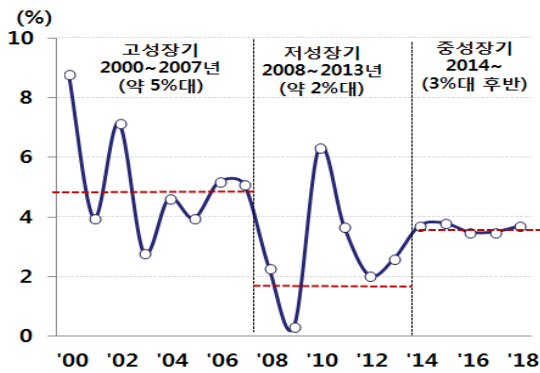
- 한일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조건



1. 한국경제, 중성장 시대 진입 우려 고조

- (국내 경제 중성장 시대 진입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거쳐 향후 국내 경제는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전망으로, 선진국 진입 지연 우려
 - 중성장 시대 장기 지속 우려
 - 소비 및 투자 여력 미흡, 복지 확대에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고성장 시기로의 회귀가 불투명한 상황

<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추이와 전망 >



자료 : 한국은행, IMF.

< 중성장기 국내 경제의 특징 >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장 중심축 이동 | 노동과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 급락 |
| 소비여력 회복 부진 | 자산가격 하락, 가계부채, 고령화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 |
| 투자여력 미흡 | 설비 및 건설 투자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여력 미흡 |
| 복지 확대에 성장여력 축소 | 고령화 사회 진입, 복지예산 확대에 성장 여력 축소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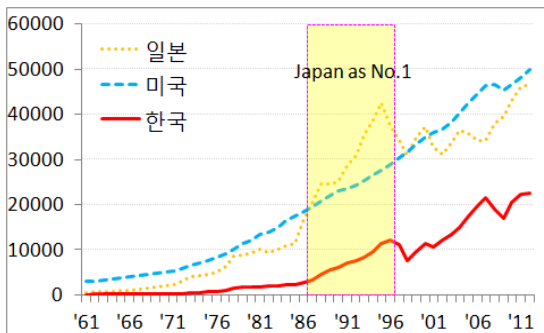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- 선진국 진입 지연 우려

- 일본은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의 1인당 GDP 수준을 1987년부터 추월하면서,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국가로 성장
-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일본의 버블붕괴와 같은 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서, 일본과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도 큰 상황

< 한미일 1인당 GDP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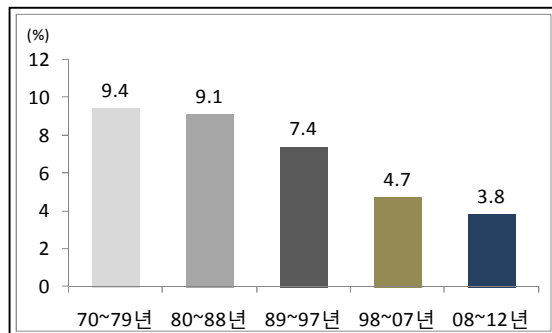
(명목 달러)



자료 : World Bank.

<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>

(%)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2.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경제

1) 경제규모와 과학기술경쟁력은 일본 추격 중

○ (경제 규모) 세계 GDP 순위 및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추격 중

-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1/3 수준

- 한국의 2012년(추정) GDP 규모는 약 1.6조 달러로 일본의 약 4.6조 달러의 1/3 수준
- 세계 GDP 규모 순위는 한국이 12위, 일본은 4위

-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의 약 50% 수준

- 한국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95년 1만 1,779달러에서 2012년에는 2만 3,021달러에 달할 전망
- 일본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81년 1만 218달러, 1987년 2만 367달러, 1992년 3만 973달러, 1995년 4만 2,516달러를 달성, 2012년에는 4만 6,896달러에 이를 전망
- 한편,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을 일본에 비교하면,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불과
- 하지만, 198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약 20%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, 2012년 약 50% 수준에 이르러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

< 세계 GDP 순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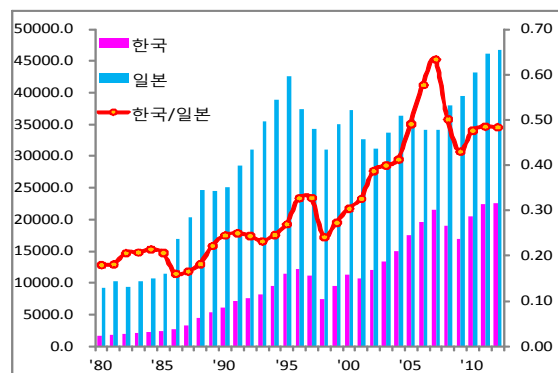
| 순위 | 국가 | GDP(구매력 평가) |
|----|----|-------------|
| 1 | 미국 | 15.7조 달러 |
| 2 | 중국 | 12.4조 달러 |
| 3 | 인도 | 4.7조 달러 |
| 4 | 일본 | 4.6조 달러 |
| 12 | 한국 | 1.6조 달러 |

자료 : CIA.

주 : 2012년 기준 추정치.

< 한일 1인당 GDP 추이 >

(1인당 GDP, 달러) (한국/일본)



자료 : WB,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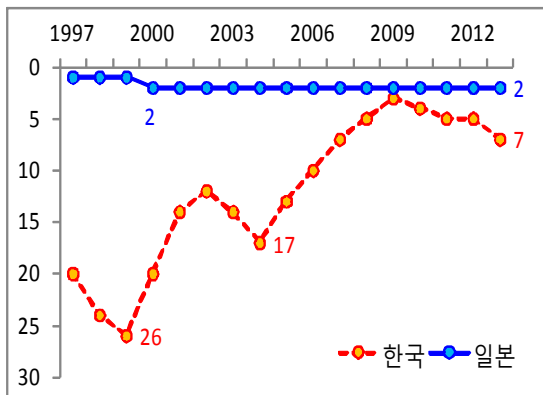
주 : 2012년은 추정치임.

○ (과학기술 경쟁력)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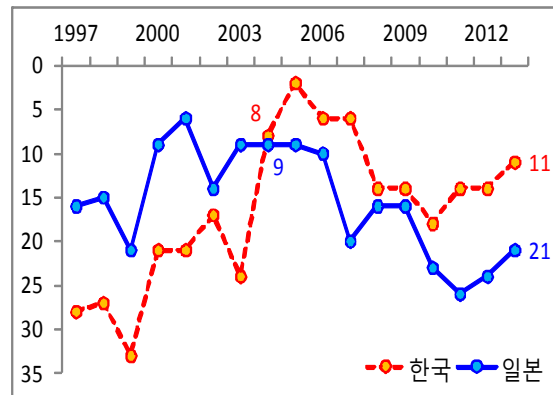
- IMD 평가에 따르면 과학경쟁력은 일본, 기술경쟁력은 한국 우세

- IMD에 따르면 한국은 對日 과학경쟁력 격차를 대폭 축소시켜 왔을 뿐 아니라 기술경쟁력은 일본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
- 한국의 과학경쟁력 순위는 1999년 26위에서 2013년 7위로 19계단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24계단에서 5계단으로 축소됨
- 기술경쟁력은 2004년 한국이 8위, 일본이 9위로 한국이 역전시킨 이후 최근 2013년에는 한국 11위, 일본 21위로 나타남

< 한일 과학경쟁력 순위 추이 >



< 한일 기술경쟁력 추이 >



자료 : IMD.

- 과학기술 경쟁력을 부문별로 평가해 보면 한국은 절대지표 열위가 지속되고 있고, 상대지표로도 과정과 성과 지수는 아직 열위에 있음

-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를 위해 투입, 과정, 성과로 지표를 구분하고 절대지표와 상대지표로 나눠 평가
-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 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절대지표 종합지수는 44.4로 일본 124.6의 1/3 수준에 불과하나, 2001년 수준에 비해서는 격차 축소
- 상대지표에서는 투입지수가 일본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과정지수와 성과지수도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추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한일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를 위한 지표 구분 >

| 구분 | | 지표 |
|------|----------|--|
| 절대지표 | 투입지표(2개) | - R&D 투자, 총연구원수 |
| | 과정지표(3개) | - 논문수, 삼극특허건수, PCT 특허건수 |
| | 성과지표(2개) | - 기술무역 수지비,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|
| 상대지표 | 투입지표(2개) | - GDP 대비 R&D 비중,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|
| | 과정지표(3개) | - 연구원 1인당 논문건수,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건수, 연구원 1인당 PCT 특허건수 |
| | 성과지표(2개) | - 기술무역 수지비/R&D 투자, 하이테크산업 수출액/R&D 투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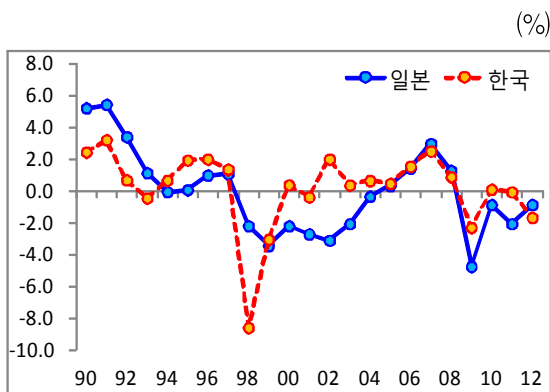
< 한일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 결과(일본 2005년=100) >

| 구분 | | 절대지표 | | | | 상대지표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투입 지수 | 과정 지수 | 성과 지수 | 종합 지수 | 투입 지수 | 과정 지수 | 성과 지수 | 종합 지수 |
| 한국 | 2001년 | 18.3 | 11.4 | 20.3 | 16.7 | 67.0 | 56.9 | 123.0 | 82.3 |
| | 2005년 | 25.1 | 22.0 | 39.2 | 28.8 | 79.2 | 83.1 | 164.8 | 109.0 |
| | 2010년 | 39.9 | 32.1 | 53.3 | 41.8 | 108.6 | 82.6 | 129.9 | 107.0 |
| | 2011년 | 44.5 | 34.5 | 54.2 | 44.4 | 117.2 | 81.3 | 116.4 | 105.0 |
| 일본 | 2001년 | 88.3 | 78.6 | 79.2 | 82.0 | 93.7 | 81.9 | 98.3 | 91.3 |
| | 2005년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| | 2010년 | 102.4 | 109.1 | 130.6 | 114.1 | 97.5 | 113.2 | 120.4 | 110.4 |
| | 2011년 | 105.2 | 117.4 | 151.3 | 124.6 | 99.9 | 121.6 | 132.9 | 118.1 |

2)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경제

- (성장 잠재력 약화) 최근 한일 양국의 성장세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장 잠재력이 약화
 - 한일 양국 GDP 갭률 마이너스 지속
 - GDP 갭이란 잠재 GDP에서 실질 GDP를 뺀 값을 말하며, 플러스일 경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, 마이너스일 경우 잠재성장률을 하회
 - 한일 양국 모두 GDP 갭률이 2009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
 - 한일 양국 모두 경제 성장세가 약화
 -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1.5%에서 2000년대 들어 0.9%로 하락
 -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6.7%에서 2000년대 들어 4.3%로 하락
 - 잠재성장률도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, 한국은 급락하고 있음
 -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0.3%, 2000년대 들어 1.9%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
 -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약 7%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4%대, 최근에는 3%대 후반으로 빠르게 하락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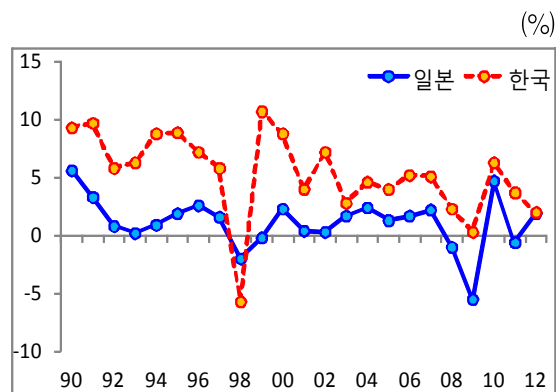
< 한일 GDP 갭률 추이 >



자료 : OECD, Economic Outlook No 94, November 2012, OECD Annual Projections.

주 : GDP 갭률은 잠재 GDP에서 실질 GDP를 뺀 값으로 %로 표시.

< 한일 실질 GDP 성장률 추이 >



자료 : OECD, Economic Outlook No 94, November 2013, OECD Annual Projections.

1) OECD, Economic Outlook No 94, November 2013, OECD Annual Projections을 이용, 현대경제연구원 추산.

○ (산업공동화 우려 심화) 한일 양국 모두 국내 투자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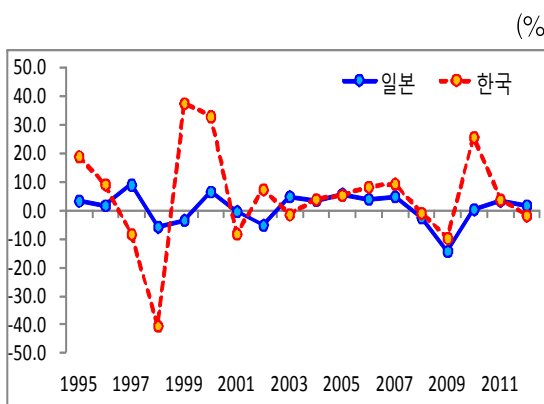
- 한일 양국 모두 자국 내 투자 침체

-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0.9%로 0%대에 머물고 있음
-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
-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5~2012년 평균 5.0%에 불과

- 양국 해외직접투자는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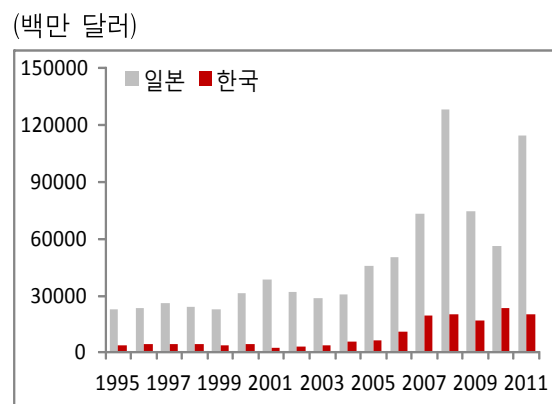
- 한일 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일본이 10.7%, 한국이 11.5% 증가

< 한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日本 内閣府.

< 한일 해외직접투자 추이 >



자료 : OECD.

○ (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)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저출산 현상이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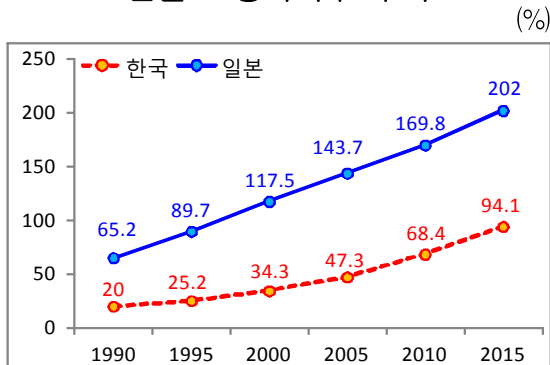
- 한일 양국 모두 고령화 진행 가속

- 일본의 경우 0~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 65.2에서 2010년 169.8, 2015년에는 202.0까지 상승할 전망
- 한국도 노령화지수가 1990년 20.0 수준에서 2015년에는 94.1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저출산 현상은 한국이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

- 합계출산율은 출산가능연령(15~49세)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
-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여성 1인 당 1.3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.42명 수준까지 회복
- 한국의 경우 2005년에 여성 1인 당 1.22명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후 2015년에는 1.39명으로 다소 회복되나,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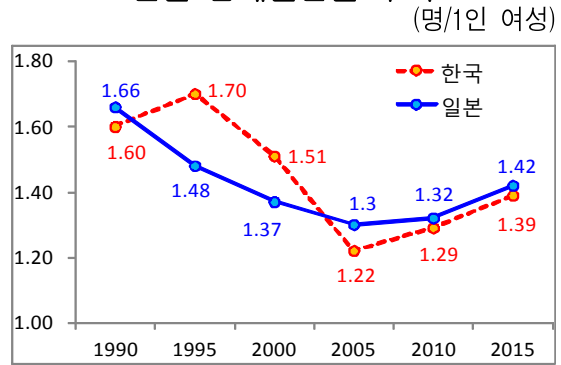
< 한일 노령화지수 추이 >



자료 : UN, 통계청.

주 : 노령화지수는 0-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말함.

< 한일 합계출산율 추이 >



자료 : UN, 통계청.

주 :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인 15-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.

○ (양극화 심화) 한일 양국 모두 양극화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

-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는 일본이 높은 수준이나, 한국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승
 - 일본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0.321에서 2000년대 후반에 0.329로 다시 상승
 -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0.306에서 2000년대 후반 0.314로 상승

< 한일 지니계수 추이 >

| 구분 | 한국 | 일본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1990년대 중반 | - | 0.304 |
| 2000년대 초반 | - | 0.337 |
| 2000년대 중반 | 0.306 | 0.329 |
| 2000년대 후반 | 0.314 | 0.336 |
| 2011년 | 0.311 | - |

자료 : OECD.

주 : 세후 소득 기준임.

○ (장기 내수 침체) 한일 양국 모두 투자와 민간소비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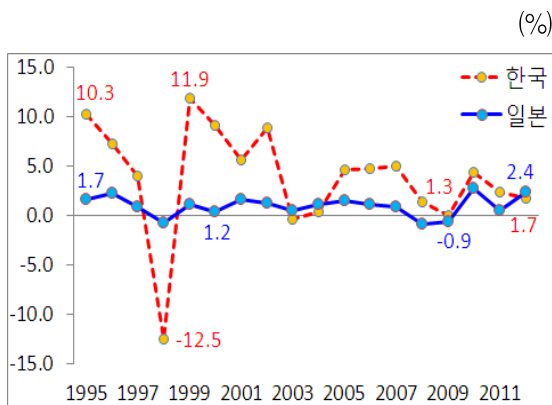
- 1995년 이후 일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1%대,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2% 수준으로 급락

- 1995년부터 일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1.0%로 1%대에 머물고 있음
- 반면,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5년-2012년까지 평균 3.8%로 일본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2%(2008~2012년)로 급락

- 한일 양국 모두 투자 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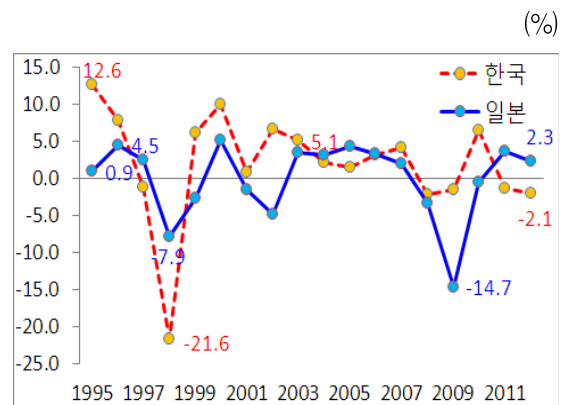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투자 증가율은 2001~2012년 평균 -0.2%로 감소세가 지속
- 한국은 동기간 평균 1.9%로 일본을 상회, 하지만 최근 5년간 투자 평균 증가율이 -0.1%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

< 한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Cabinet Office, Government of Japan.

< 한일 투자 증가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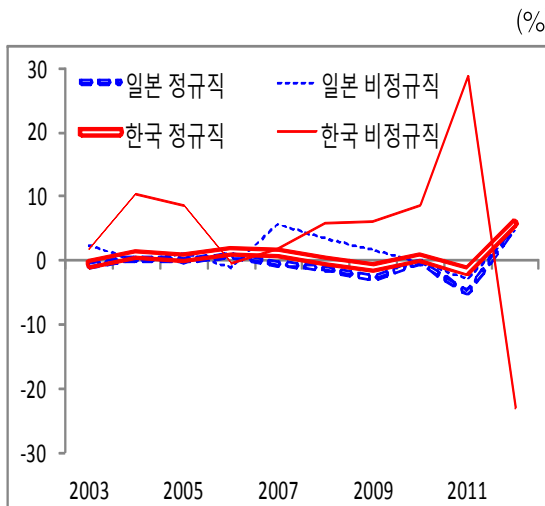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Cabinet Office, Government of Japan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추산.
주 :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합임.

○ (고용 환경 악화) 한일 양국 모두 고용 확대 한계 상황에 직면, 정규직 고용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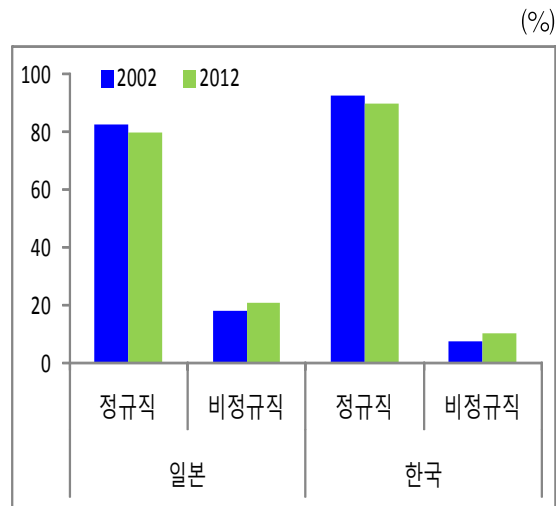
- 2012년을 제외하면 일본은 최근 총고용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, 2010~2011년 연속 비정규직 고용자도 감소)
 - 일본의 고용자 수는 2012년 6,104만 명으로,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6,263만 명에 비해 159만 명 감소한 수준
 - 한편, 일본의 총고용자 수가 증가했던 2004~2007년을 살펴보면, 정규직은 2007년부터 감소로 전환된 반면, 비정규직은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 17.7%에 달했던 비정규직 비중이 2011년에는 20.6%까지 상승
 - 특히, 2010년부터는 비정규직 고용자마저 감소세로 전환
- 2012년을 제외하면 한국도 정규직 고용자 수가 미미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고용수도 증가 양상)
 - 2003~2011년 사이에 전체 고용자 수는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보여, 총 고용자 수는 2003년 대비 2011년에 8.6% 증가
 - 총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규직 고용자 수가 2008년 2,107.3만 명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에 2,060.8만 명으로 감소한데 반해, 비정규직은 2002년 166만 명에서 2011년에 321.6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한데 따른 현상
 - 이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은 2002년 7.6%에서 2011년 13.5%까지 상승

< 한일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자 증감률 >



자료 : OECD.

< 한일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>



자료 : OECD.

- 2) 일본의 고용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~2011년까지 4년간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. OECD.
- 3) 한국의 고용자수는 2009년에 2008년 약 2,324만 명에서 0.4% 감소한 약 2,314만 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, 이후 1%대의 낮은 수준으로 고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음. OEC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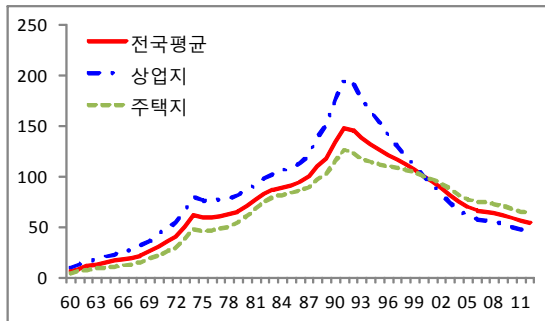
○ (부동산시장 및 건설 투자 부진) 일본은 버블붕괴 후 지가 및 건설투자가 1970년대 수준으로 하락, 한국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 지속

-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및 건설 시장 부진 지속

- 일본의 상업지가격지수는 1991년 199.5, 주택지가격지수는 126.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에는 평균 시가지가격지수가 54.2까지 하락하여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
- 일본의 건설투자도 1992년 약 84조 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45.3조 엔으로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축소

< 일본 시가지가격지수 추이 >

(2000년 3월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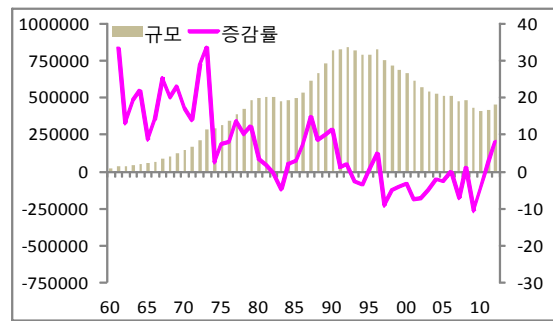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日本不動産研究所, 市街地価格指数・全国木造建築費指数 및 日本 總務廳 統計局.

< 일본의 건설투자 추이 >

(억 엔)

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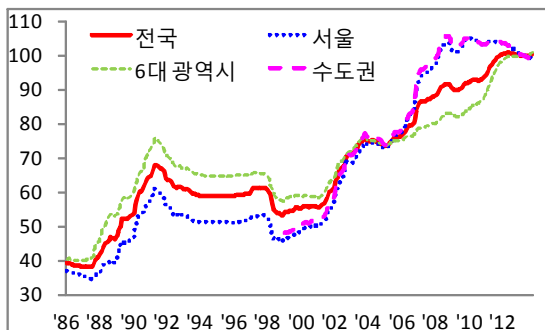
자료 : 日本 國土交通省, 平成24年度建設投資見通し, 2012년 6월 22일.

- 한국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

- 한국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12년 5월 103.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 이후 하락세 지속. 특히, 수도권은 2011년 중반 이후 가격 하락세
- 한국의 건설투자는 2009년 약 159.2조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143.0조 원으로 2002년대 수준으로 축소

< 한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>

(2011년 6월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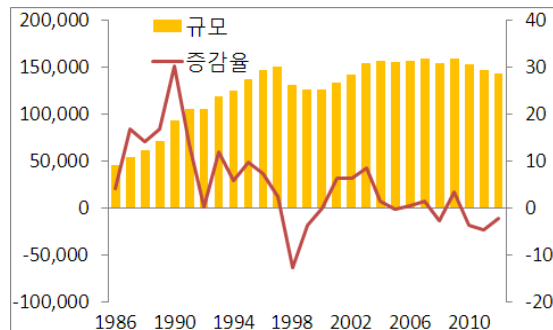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국민은행.

< 한국의 건설투자 추이 >

(십억 원)

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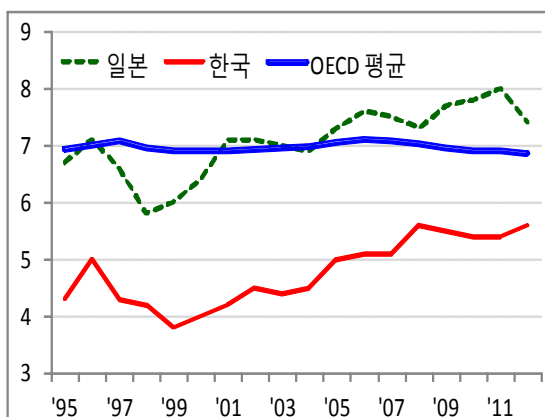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.

3) 사회적 자본도 일본에 열세인 한국

- 한국은 각종 사회적 자본 수준들이 일본에 비해 아직도 약함
 - 영국의 Legatum Institute의 Prosperity Index(번영지수)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교육, 기업가 정신 및 기회의 2개 부문 이외에는 일본에 비해 큰 격차로 뒤지고 있음
 - 영국의 Legatum Institute는 2010년부터 8개 부문에 걸쳐 Prosperity Index(번영지수)를 발표
 -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일본에 무려 31위나 순위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,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특히 취약
 - 국제투명성기구(TI; 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부패지수(CPI; 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과는 큰 격차
 - 2012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5.6으로 일본 7.4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
 - 같은 해 한국은 OECD 평균 6.9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05년에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 이후 2012년까지도 유지

< 한일 양국 간 CPI 지수 추이 >



자료 : Transparency International.
 주 : 2012년 지수 값은 10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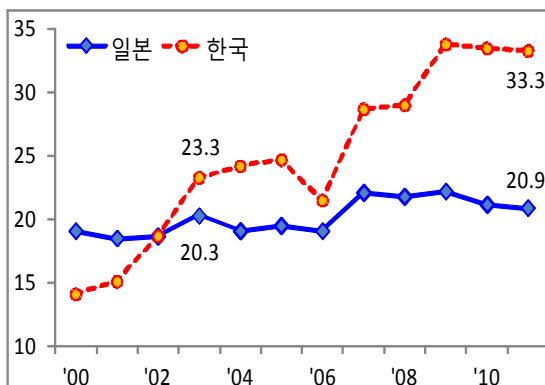
< 2012년 부문별 번영지수(Prosperity Index) >

| 구분 | 한국 | 일본 | 한국-일본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|
| 사회적 자본 | 51 | 20 | 31 |
| 개인의 자유 | 56 | 42 | 14 |
| 안전보장 | 40 | 16 | 24 |
| 건강 | 24 | 6 | 18 |
| 교육 | 7 | 23 | -16 |
| 거버넌스 | 30 | 22 | 8 |
| 기업가정신 및 기회 | 19 | 23 | -4 |
| 경제 | 23 | 12 | 11 |

자료 : Legatum Institute.
 주 : 149개국 중 순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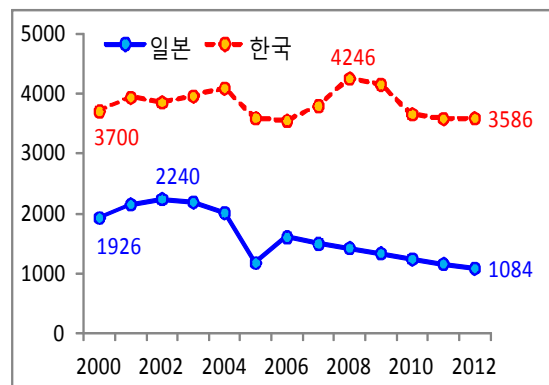
- 2000년대 초반 이후 자살률이 일본을 상회하고,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등 사회적인 불안 정도도 일본에 비해 높음
-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2003년부터는 일본을 상회하는 수준
 -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 당 14.1명에서 2011년 동 33.3명으로 약 2.4배 수준으로 증가
 - 2003년부터 8년 연속 OECD 최고 수준을 유지
 - 일본은 2003년에 20.3명으로 20명대에 진입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.2명으로 최고 수준에 달한 이래 최근 다시 20.9명으로 하락
 - 한국은 2003년 23.3명으로 일본 20.3명을 추월하기 시작, 2011년에는 약 12.4명 정도 높은 수준으로까지 확대
- 한국의 범죄율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임
 - 한국의 범죄율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,246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3,586건으로 감소
 - 다만 이는 2011년 일본 1,084건의 3배 이상 수준

< 한일 자살률 추이 >



자료 : OECD.
주 : 10만 명 당 자살 규모.

< 한일 범죄율 추이 >



자료 : 한국 경찰청, 2011 경찰통계연보; 日本警察廳警察白書 各年호.
주 : 인구 10만 명 당 범죄 건수.

○ 노벨상 수상자 수도 한국이 절대적 열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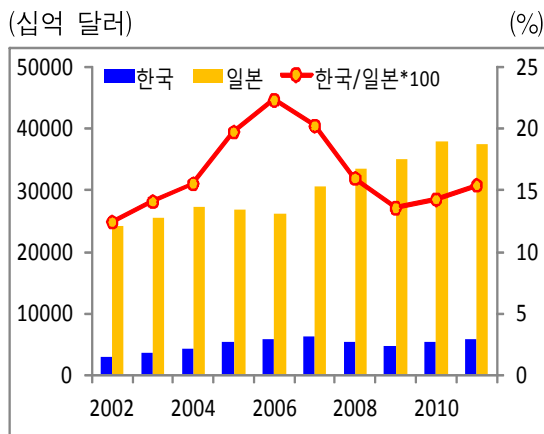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1건이 전부이나 일본은 유카와 히데키(湯川 秀樹)의 1949년 물리학상을 비롯해 총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
 - 일본의 경우 물리학상 6명, 화학상 7명, 의학상 2명, 문학상 2명, 평화상 1명으로 총 18명의 노벨상 수상자 보유

< 일본의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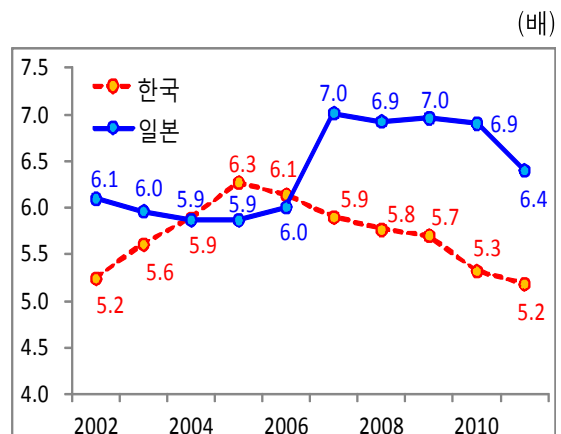
| 분야 | 연도 | 이름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물리학상 | 1949년 | 유카와 히데키(湯川秀樹) |
| | 1965년 | 토모나가 신이치(朝永振一郎) |
| | 1973년 | 에사키 레오나(江崎玲於奈) |
| | 2002년 | 코시바 마사토시(小柴昌俊) |
| | 2008년 | 코바야시 마코토(小林誠) |
| | 2008년 | 마스카와 토시히데(益川敏英) |
| 화학상 | 1981년 | 후쿠이 켄이치(福井謙一) |
| | 2000년 | 시라카와 히데키(白川英樹) |
| | 2001년 | 노요리 요우지(野依良治) |
| | 2002년 | 타나카 코우이치(田中耕一) |
| | 2008년 | 시모무라 오사무(下村脩) |
| | 2010년 | 스즈키 아키라(鈴木章) |
| | 2010년 | 네기시 에이이치(根岸英一) |
| 의학상 | 1987년 | 토네가와 스스무(利根川進) |
| | 2012년 | 야마나카 신야(山中伸弥) |
| 문학상 | 1968년 | 카와바타 야스나리(川端康成) |
| | 1994년 | 오오에 켄자부로(大江健三郎) |
| 평화상 | 1974년 | 사토우 에이사쿠(佐藤榮作) |

- 국부(국가자산)도 한국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, GDP 대비 국부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
 - 한국의 국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
 - 한국의 국부 규모는 2011년 현재 총 5조 7,824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조 1,858억 달러에서 축소되었으나, 200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
 - 일본의 국부는 2007년부터 증가세 지속
 - 일본의 국부 규모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감소하다 200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에는 총 37조 5,358억 달러 수준에 달함
 - 한국의 국부 규모는 일본의 20%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
 - 한국의 국부 규모는 2011년 일본의 15.4%에 불과한 수준이며, 이 비중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
 - GDP 대비 국부 규모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하락세 지속
 - 한국의 GDP 대비 국부 규모는 2011년 5.2배 수준으로 일본의 6.4배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
 - 더욱이 한국의 GDP 대비 국부 규모는 2005년 6.3배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하락세에 있음

< 한일 국부 추이 >



< GDP 대비 국부 비중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日本 内閣府로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추산.

주 1. 국부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.

2. 한국은 국가자산통계에서 비금융자산,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서 금융자산을 이용했으며, 일본은 국가자산통계를 이용.

3. 시사점

- 첫째,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·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함
 -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몰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견실하고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 향상은 물론 성장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
 - 특히, 한국경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주요 산업들의 대부분이 1960~1970년대 육성되어 왔던 산업들로 최근 성장세는 물론 신규 고용 창출력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신성장동력 발굴·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
 - 따라서 정부 국정과제인 ‘창조경제 활성화’도 미시적인 접근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 - 한편,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요소 투입 면에서는 노동의 양적·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, 경제전반의 투자 확충을 위한 친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할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
 - 노동의 양적 투입 측면에서는 여성과 청년, 고령층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, 노동 투입과 수요 미스매칭을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꾀해야 함
 - 노동의 질적 투입 측면에서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개혁과 관련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
 - 한편, 경제전반의 자본 투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, 투자 관련 규제 완화,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등 투자환경 개선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(FDI)의 유입 촉진 전략이 병행·추진되어야 함
 -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이 1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, R&D 투자의 쓸림현상을 방지하는 등 R&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,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나,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 등이 필요함

- 둘째,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총량 증대와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
 -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'성장 없는 고용'은 '고용 없는 성장'보다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,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관건
 - 따라서, 창조경제 실현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
 - 창조경제란 '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'로의 패러다임 전환. 즉 노동 투입이나 자본투입 같은 '요소투입형' 경제에서 창의적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에 기초한 '창조·혁신형' 경제로의 전환을 말함
 -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동시 달성을 의미
 -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으로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청년,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
 - 일-가정 양립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비경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견인
 - 일-학업 양립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고, 특히 '선취업-후진학'을 뒷받침하는 듀얼시스템 정착
 - 베이비붐세대의 점진적 은퇴를 돕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가교일자리 창출
 - 기타 장시간 근로 개선, 유연근무 확산, 고용-복지 연계 등을 꾸준히 추진
- 셋째, 의료 관광, 복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 확충과 더불어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, 금융 경쟁력 제고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
 -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가 재검토 등을 통해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걸 맞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함

- 차세대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사회서비스를 육성
 - 1992~2012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약 8.1%로 동기간 전산업 1.3%, 제조업 -1.0%, 서비스업 전체 3.0%를 상회
 - 사회서비스 산업 관련 사회복지업과 의료 및 보건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각각 0.90, 0.83으로 제조업 0.56, 전산업 0.67보다 높은 수준
 - 국내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, 선진국일수록 사회서비스의 경제 기여도가 높음

- 의료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
 - 외국인환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35.9%, 2011년 49.5%에 달하면서 2011년 기준 총 외국인환자 수는 12만 명을 초과
 - 이에 외국인 환자 총 진료비가 2009년 547억 원에서 2011년 1,809억 원으로 급증, 2006~11년 건강 관련 여행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.2% 증가
 - 2011년에는 그동안 적자행진을 지속하던 건강관련 여행서비스 수지가 5,2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
 - 생산유발효과가 2009년 1,190억 원에서 2011년 3,590억 원으로 늘어났고, 의료통역사 등 신규일자리 1,800개 창출

-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 등 선도업종의 호황이 국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낙수효과(trickle-down effect) 제고
 -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(히든 챔피언)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강화해야,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의 호황으로 연결 가능
 -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
 -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,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정비

- 금융위기 이후 금융-산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,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, 전문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금융허브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

-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
-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도입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을 장기화하고 급격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
- 아울러, 반복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만큼 선별적 도입이 필수

○ 넷째,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 및 연착륙을 위한 노력 가속

-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들의 조속한 처리 시급
 - 취득세감면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,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로 시장 심리 회복 시급
-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 필요
 -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, 1회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도 고려
 - 하우스푸어 등 임대인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확정일자에 대한 법적효력 강화
 - 전월세전환율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거래 가능한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
- 대형주택의 초과공급 해소 방안 마련
 -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대형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·제도 개선
 - 특히, 대형주택을 다수의 중소형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
 - 비수도권의 대형 주택이 수도권에 전철을 뺏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필요
- 중소형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 대응책 마련
 -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축소정책의 경우, 중소형 대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수급 환경 분석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
 -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

- 한국형 부동산 시장 환경 개선 방안 마련

- 부동산 수요와 공급 기반이 타 선진국과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, 중장기 인구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적인 중장기 부동산 시장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
○ 다섯째, 사회 각 부문의 신뢰 수준 및 통합력 제고, 부패 방지 강화, 국가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함

- 사회통합, 투명성, 신뢰, 정책의 예측성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함

-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완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해,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보완,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,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이 필요
- 신뢰, 투명성, 반부패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
-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(ISO-26000)을 참고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, 시민사회단체,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

○ 여섯째, 재정 건전성 기반 하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부담의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

-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‘재정적자누적→국가채무급증→이자부담 증가→재정적자확대’의 우려 고조

-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
- 국가채무가 1997~2012년에 年 14.2% 증가(60.3조→443.1조원)하여, 명목 GDP증가율 6.3%(506.3조→1,272.5조원)를 크게 상회
-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2004년 9.0조원에서 2012년 19.1조원으로 年9.9% 증가
- *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편이며, ‘적자누적-부채급증’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경우 재정위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

- 경기 상황에 맞는 계획적 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
 - 경제증가율이 2012년 2.0%, 2013년 2.6%에서 2014년에 3.8%로 회복될 전망 (정부전망치는 2014년 3.9%)
 - 정부는 2012년에 -17.4조원(명목GDP의 -1.4%), 2013년에 23.4조원(-1.8%)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였고, 2014년에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-25.9조원 (-1.8%)에 달하는 적자재정 편성

-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확충 시급
 - 소모성 지출 성격이 강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2007~2012년에 연평균 8.6% 증가하였고, 2013~2017년에도 6.4% 증가할 전망
 - 투자성 지출성격이 강한 SOC 지출은 동 기간 +4.7%에서 -6.4%로, 산업·중소기업 지출은 +3.7%에서 -5.7%로, R&D 지출은 +10.3%에서 +3.9%로 축소

- 마지막으로,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통일 준비를 지속해야 함
 - 남북한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,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

 -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'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 시장 개척', 평화비용 절감 등의 장기 효과도 발휘

 - 이산가족의 70% 가량이 77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**HRI**

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이부형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선임연구위원 정민(2072-6220, chungm@hri.co.kr)